

# 최근 세계 경제상황이 일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⑥ - 일본

와타나베 히로아키 (일본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JILPT) 노동경제분석부문 주임연구원)

## ■ 머리말

11월 6일, 도요타 자동차는 2008년 4~9월기 연결결산(미국 회계기준)과 2009년 3월기 성과 전망을 하향수정하기로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000억 엔으로 전기 대비 74% 감소하였는데 이 수치는 연초의 전망을 1조엔 밑도는 수치다. 도요타 자동차의 성과 하향수정은 금융위기 영향이 파급을 미쳐 북미 및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점, 또한 상정환율을 최근 엔고 현상과 함께 재고(再考)한 점에 기인한다. 도요타 자동차의 성과 하향수정 발표는 ‘도요타 쇼크’라고 불리며 일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도요타 자동차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러자 도요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일본 자동차 업계가 성과 하향수정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게다가 도요타보다 2주일 앞서 소니는 10월 23일, 2009년 3월기 연결성과전망(미국 회계기준)을 하향수정하기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2,000억 엔으로 전기 대비 5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전망치를 2,700억 엔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소니의 성과하향 수정은 엔고 현상이 상정환율을 상회한 점,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인해 디지털 가전의 판매가 예상치를 밑돈 점에 기인한다. 전기·전자업계에서도 성과하향 수정 발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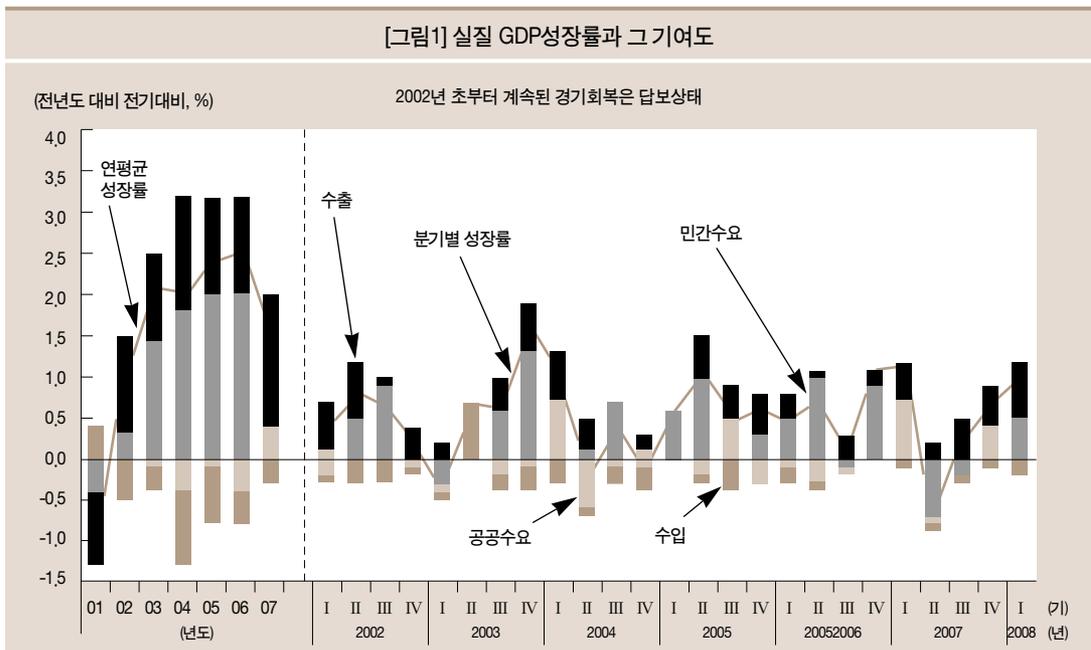
일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이 연이어 성과하향 수정 발표를 한 데 상징되듯이 일본 경제는 분명히 경기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이 글의 목적은 원유 및 원자재가 인상, 금융위기와 이에 수반하는 엔고 현상이 일본 경제, 특히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일본 노동시장 통계는 시차가 있어 금융위기 및 엔고 현상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통계수치뿐만이 아니라 일본 노동시장에서 실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기로 한다.

## ■ 일본 경제의 성장요인과 저해요인

먼저 거시경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 경제는 2002년 초부터 5년 동안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보였다. 이 기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 이상이었다. [그림 1]은 이 기간의 일본 경기회복 요인을 제시하기 위해 실질 GDP성장률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기간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온 부분은 수출이다. 수



자료 : 내각부, 『2008년도 경제재정백서』, 사단법인 시사화보사, p.6.

출판 관련 기업의 호조가 일본 경제를 견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중반 무렵부터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더니 2008년이 들어서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첫째,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등귀한 점, 둘째, 미국의 서브프라임주택 대출문제의 영향, 셋째, 최근 엔고 현상이 일본 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2007년에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등귀하여 생산비용이 기업 수익을 압박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세로 전환되어 경상이익도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으로 접어들자 서브프라임주택 대출문제가 시발점이 된 미국 경제의 감속 영향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기후퇴는 아시아 각국의 대미수출 둔화로 이어져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아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를 계속한다면 국내 수요확대만으로는 종전처럼 성장세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일본 상황에 주목해 보면 엔고 현상이 일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고는 수출업체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동시에 엔고로 인해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을 포함한 수입 가격이 저하되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금번 엔고 현상은 이러한 장·단점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을까? 이 점에 대해 스미토모신탁은행(住友信託銀行)은 엔화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교역조건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역조건 개선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석유제품, 비철금속, 식료품 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교역조건 개선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수송용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계 등 가공업종은 엔고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저하되는 장점이 적고 수출비중이 높으므로 오히려 단점이 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스미토모신탁은행(住友信託銀行), 『조사월보』, 2008년 4월호).

## ■ 통계 수치로 본 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이러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 미국 경제의 감속, 엔고에 대해 기업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니혼은행(日本銀行)의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日銀短観)

에 따르면 기업의 경기체감을 나타낸 업황 판단지수(DI : 경기감이 '양호'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에서 '악화'라는 답변을 차감한 수치)는 대기업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3(6월 조사에 비해 8포인트 저하)을 기록하였다. 특히, 자동차 및 정밀기계 등 7개업종의 DI는 수출감퇴 및 원자재 가격이 등귀함에 따라 전회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저하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중소기업의 DI는 마이너스 17(전회인 6월 조사에 비해 7포인트 악화), 비제조업도 마이너스 24(6월 조사 시에 비해 4포인트 악화)를 기록하였다.

또한, 조사된 고용인원 판단DI(고용이 '과잉'이라 답한 기업 비율로부터 '부족'이라는 답변을 차감한 수치)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부족'이라 답변한 기업이 많긴 하지만 '부족'이라 답한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과잉'이라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

그렇다면 원유·원자재 등귀, 금융위기, 엔고 현상의 영향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2가지 통계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총무성의 2008년 9월 노동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완전실업자수는 27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이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구직 사유별로 보면 '근무처 사정', '본인 사정' 등이 전년동월과 같은 수치이다. 또한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4.0%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저하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1%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저하, 여성은 3.9%로 전월과 동률을 기록하였다.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일본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노동력조사 상세집계 결과에 따르면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는 5,181만 명(전년동기대비 34만 명 감소)로 이 중 정규직원 및 종업원은 3,449만 명(전년동기 대비 34만 명 감소), 비정규직원 및 종업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계약직 사원 등)은 1,732만 명(전년동기 대비 1만 명 증가)를 기록하였다. 고용자 중 비정규직원 및 종업원 비율은 33.4%(전년동기 대비 0.2%포인트 증가)를 기록하였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유효구인배율에서도 노동시장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9월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0.84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저하하여 2004년 8월(0.84배)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0.54배가 되어 전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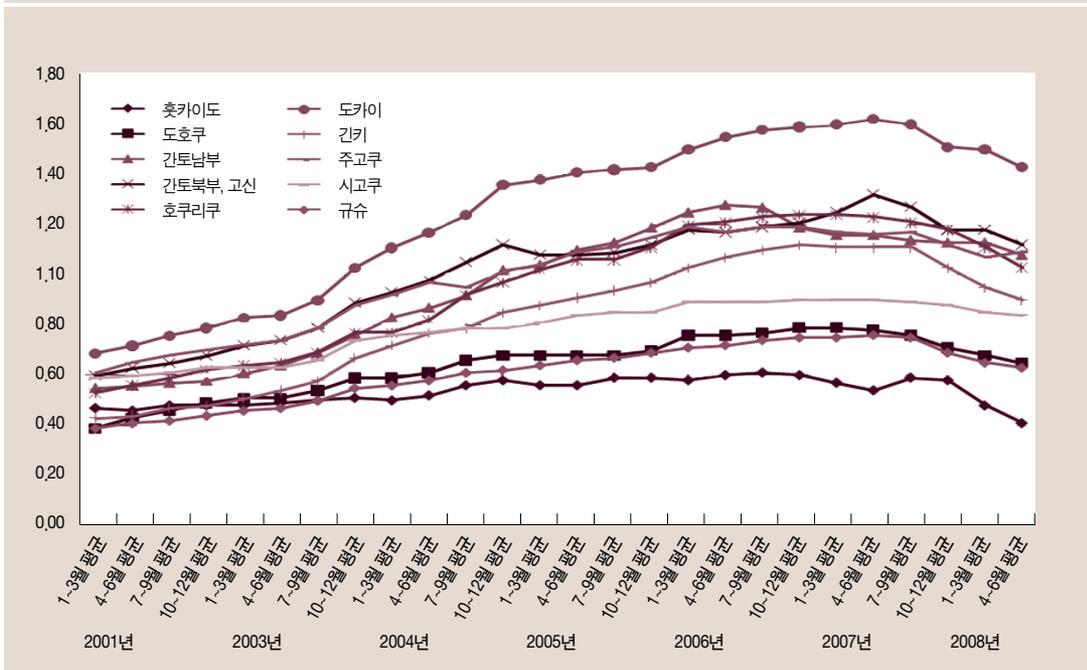
월을 0.08포인트 밑돌았다. 유효구인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2.5% 감소하여 유효구직자(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0.6% 증가를 기록하였다.

신규구인수는 전년 대비 13.4% 감소하였다. 산업별 신규구인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26.1% 감소), 제조업(22.0% 감소), 건설업(16.6% 감소), 정보통신업(16.2% 감소), 운수업(11.4% 감소), 도매 및 소매업(8.4% 감소), 교육 및 학습지원업(7.0% 감소), 음식점 및 숙박업(4.0% 감소)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의료 및 복지(10.5% 증가)는 증가하였다.

완전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완전실업률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2007년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유효구인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하락하였다. 2종의 노동통계 모두 일본의 노동시장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역별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을 살펴보면 도카이(東海)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

[그림2] 지역별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의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면,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규슈(九州)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게다가 2002년도 이후의 유효구인배율 추이를 시계열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일본 전체에서 유효구인배율 수치가 낮았지만 그 후 경기회복에 수반되어 유효구인배율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국 일률적인 개선이 아니라 도카이(東海), 간토 남부(南関東), 간토 북부(北関東)·고신(甲信), 호쿠리쿠(北陸)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컸던 점에 비해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규슈(九州)에서는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 후 대다수의 지역에서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다.

## ■ 기업의 고용조정 및 그 대응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10월에 전국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고용상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4,285개사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고용DI(‘과잉’이라 답한 회사 비율에서부터 ‘부족’이라 답한 회사 비율을 차감한 값)을 살펴보면 특히 수출형 제조업(범용 기계기구제조업, 생산용 기계기구제조업, 업무용 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 전자회로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이 26.0%(지난번 조사인 7월 조사보다 17.1%포인트 증가)로 과잉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더욱이 전체 중 18.8%의 기업이 조정관련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임금을 조정한 기업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야근규제가 45.2%, 파견사원의 재계약 정지가 23.4%, 경력사원 채용 삭감 검토가 21.3%, 업무일수 단축이 18.4% 등을 기록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고용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고용조정 사례와 정부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통계 분석을 대신 하도록 하겠다.

## 기업의 고용조정 사례

### 도요타 자동차 사례

도요타 자동차는 2007년 봄, 전년 실적보다 300명 이상 많은 3,508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전문대, 고졸 기능직이 전년보다 35명 증가한 2,000명을, 이 중 대졸 예정자를 800명, 기간공(期間工) 및 파견사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1,200명을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폭적인 증원 배경에는 1947~49년의 베이비붐세대의 대규모 퇴직 및 국내 생산량 증가 전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년 반 후가 지난 현재, 도요타 자동차 및 그룹에서는 고용조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도요타 쇼크’ 발표가 있기 꽤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올 6월에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계약 갱신도 유보하고 있다. 2008년 3월 평균 약 8,800명이었던 근로자 수를 10월에는 6,00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3,000명으로 대폭 감축하여 1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계획을 하향수정한 것에 맞춰 그룹도 각각 생산계획을 재고(再考)하고 있다.

그룹사 중 하나인 덴소(デンソー)는 3~8월에 이르는 5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400명 축소하는 한편, 아이신정기(アイシン精機)도 4~9월 말까지의 6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300명 축소했다. 또한 도요타방직(トヨタ紡織)은 8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파견근로자 250명의 계약을 정지시켰다. 이 밖에도 도요타 그룹 각사가 7, 8월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 모집을 일제히 정지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도요타 자동차와, 그룹 각사 모두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조정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축소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 및 그룹사의 고용조정 움직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치현(愛知県)의 9월 유효구인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8월의 신규구인수를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하였다. 이 중 자동차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은 전년동월 대비 46.0% 감소함으로써 하락세가 눈에 띈다.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각지의 관련공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역고용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고용조정 움직임은 지방 공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 중 규슈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는 2009년 3월 말까지 최대 1,000명 규모의 파견사원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도 생산계획을 전년 대비 26% 감소로 변경한 데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부 생산라인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잉여인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까지 2교대제(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로 가동한 것을 2009년 1월부터는 오전 8시부터 교대 없이 정시 가동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500~1,000명의 잉여인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1,400명에 이르는 파견사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휴가 취득을 장려하는 한편, 기술연수 등을 보낼 방침이다.

게다가 도요타 자동차는 오키나와현(沖縄県)에서 매월 50명 정도의 계절공(季節工)을 채용했으나 2008년 6월 이후의 채용은 없는 상태이다. 도요타 자동차의 하청부품업체의 채용인원도 2008년 4월인 140명에서 7월 이후는 0명인 상태다.

#### 기타 자동차산업의 고용조정

고용조정의 전형적인 예로써 도요타 자동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고용조정은 도요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타 자동차 업체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닛산(日産), 스즈키, 마쓰다, 이스즈 등의 회사가 총 25만 대 이상의 감산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른 고용조정인원수는 총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가 고용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

#### 전기전자부품 관련기업의 고용조정

비정규직 근로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자동차 관련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부품 관련기업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모두 생산조정과 그에 따른 고용조정 원인은 자동차 및 휴대전화 등 세계적인 수요감소 및 시황 침체가 요인이다. 자동차 관련기업과 함께 지역고용을 지탱해 온 전기전자부품 관련기업의 업황 악화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규슈(九州)의 도시바(東芝) 및 NEC그룹 등은 가동률을 낮추고 있으며 소재 및 검사장치 등, 주변산업 수주도 축소하고 있다. 규슈의 반도체 생산액은 2007년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2/4분기의 규슈의 반도체 생산액은 4,475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였다. 고용조정 움직임도 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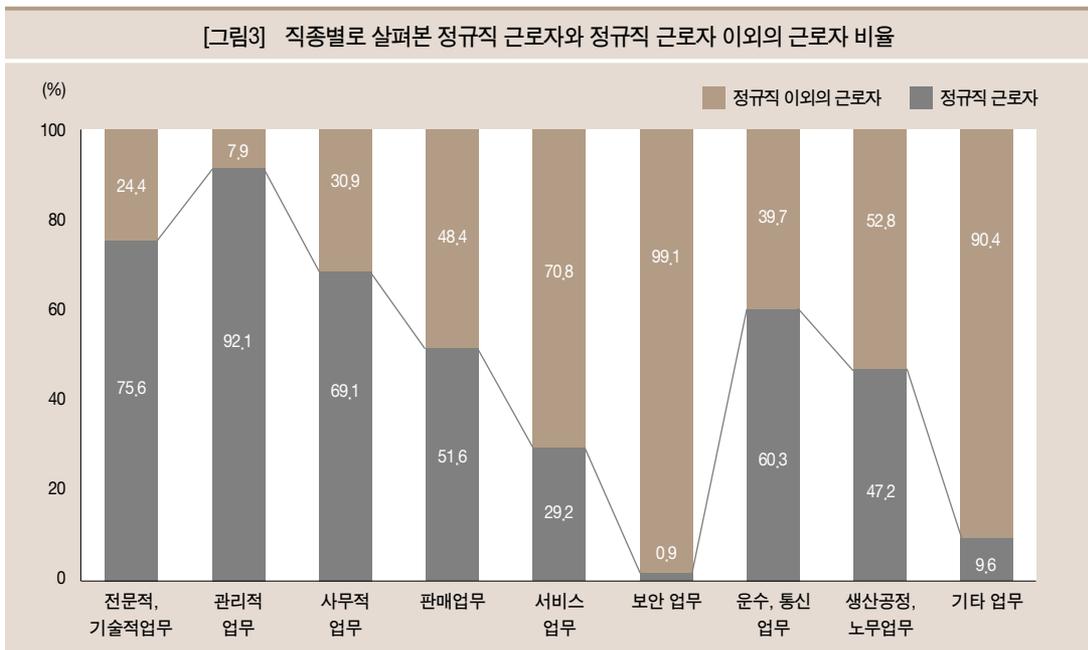
도시바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에현(三重県) 윗가이치시(四日市市) 공장과 이와테현(岩手県)

기타가미시(北上市)의 이와테도시바엘렉트로닉스(岩手東芝エレクトロニクス) 공장에서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약 380명의 계약갱신 보류 및 중도 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MP3 기억장치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경기악화로 설비투자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후지쓰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富士通マイクロエレクトロニクス)는 비정규 근로자를 100명 이상 축소할 예정이며 샤프도 휴대전화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히로시마현(広島県) 후쿠야마(福山) 공장의 파견사업 중 대다수인 3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정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일본 기업의 고용조정의 특징은 계약제 및 파견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



자료 : 후생노동성, 「2007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표 1〉 정규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기업 비율)

(복수응답 3회, 단위 : %)

	정규직이 외의 근로자 가 있는 사업소	정규직 확보 불가	정규직 중요업 무특화	전문적 업무 대응	실전력, 능력있는 인재 확보	경기변동 부응하여 고용량 조절	장기영업 (조업) 시간 대응	1일, 주중 업무성수 비성수 대응	임시, 계절적 업무량 변화대응	임금절약 위해	임금외 노무비용 절약위해	고령자 재고용 대책위해	정규직 육아, 간병휴업 대체위해	기타
2007년														
정규직이외 노동자 있음	100.0	22.0	16.8	24.3	25.9	21.1	18.9	31.8	16.6	40.8	1.1	18.9	2.6	14.1
계약직 근로자	100.0	18.2	10.6	43.6	38.3	15.6	6.4	4.5	5.0	28.3	8.1	11.0	2.4	13.2
축삭 근로자	100.0	10.9	5.1	35.4	41.9	2.2	1.2	3.4	1.6	20.5	5.2	67.3	0.4	6.4
사외파견 근로자	100.0	23.5	2.6	47.9	48.8	2.6	0.6	1.5	1.9	8.9	4.5	3.2	0.1	34.9
파견 근로자	100.0	26.0	20.4	20.2	35.2	25.7	3.4	13.1	20.3	18.8	16.6	2.6	6.5	7.0
임시 근로자	100.0	14.7	3.0	22.9	21.9	23.5	12.0	29.2	35.1	27.2	15.4	9.5	0.8	0.7
파트타임 근로자	100.0	17.6	15.3	12.7	11.8	18.0	21.7	37.2	14.5	41.1	21.3	7.9	1.6	10.6
기타	100.0	20.8	14.5	15.9	13.1	23.6	16.1	16.9	16.7	36.2	14.8	8.9	1.7	14.2
2005년														
정규직이외 노동자 있음	100.0	20.1	15.4	23.1	26.3	26.5	18.1	28.0	17.6	51.7	22.5	14.2	3.0	3.8
계약직 근로자	100.0	14.3	15.4	44.9	37.9	21.7	8.9	3.5	9.0	30.3	11.9	7.3	2.1	1.8
축삭 근로자	100.0	6.4	7.2	35.1	38.7	7.7	3.9	1.6	3.7	26.1	6.1	56.5	0.2	1.8
사외파견 근로자	100.0	11.9	8.5	51.1	53.4	9.6	2.2	1.6	1.3	13.1	7.7	4.1	0.1	13.9
파견 근로자	100.0	16.9	17.2	25.9	39.6	26.4	2.8	8.0	14.4	26.2	26.6	1.7	8.8	1.7
임시 근로자	100.0	13.6	7.6	11.6	19.2	30.0	17.8	23.4	45.5	37.8	16.4	6.7	2.3	0.3
파트타임 근로자	100.0	12.4	12.8	10.1	12.3	23.4	20.4	35.0	15.4	55.0	23.9	6.4	2.1	2.4
기타	100.0	15.8	14.5	15.0	14.6	25.4	10.0	18.3	23.6	43.8	22.3	5.1	3.4	4.7

주 : 1)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그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를 응답한 기업에 대해 집계했다.

2)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전체를 모두에 응답하고 있으므로 답변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3)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기본급 이외, 통근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임금외의 노무비용'이란 건강보험 등 사업주부담액,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관계등 비용을 말한다.

자료 : 후생노동성 '2007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자 활용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현재 고용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7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7.8%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2%포인트 상승하였다. 또한 파견 노동자 비율이 4.7%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및 금융

보험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이 눈에 띈다.

[그림 3]은 동일 조사로 직종별로 정규직 근로자 이외 근로자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업무 등, 전문성이나 고도의 기술,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낮으며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요구되지 않는 보안업무 및 서비스업무, 생산공정, 노무업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생산공정 및 노무업무에도 높은 기술이나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나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높은 기술 및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는 정규직 근로자를 배치하고 그러한 기술 및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배치되도록 구분하고 있다.

또한, <표 1>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를 취업형태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 2007년 조사결과 중 파견사원을 활용하는 이유에 주목해 보면 ‘정규직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어서’(26.0%), ‘실전경험 및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35.2%), ‘경기변동에 부응하여 고용량을 조정하기 위해’(25.7%)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고용조정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한 파견 근로자를 경기후퇴기로 접어들었으므로 고용조정 대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책

그렇다면 고용조정이 발표된 경우, 혹은 실시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자동차 업체 마쓰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마쓰다는 2008년 10월 하순부터 히로시마현(広島県)의 본사사원에 대해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용조정을 실시하였다. 생산부문에서는 본사공장 등에서 2008년 12월 하순까지 총 1,300명의 파견 근로자를 축소할 예정이다. 생산규모 축소에 수반되는 국내 공장 파견 근로자 삭감조치에 덧붙여 사무직 등의 간접부문에서도 파견 근로자 고용조정을 진행시켜 2008년 말까지 본사의 사무직과 기술직 파견 근로자 약 100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마쓰다의 고용조정발표에 따라 공장이 위치한 히로시마(広島) 노동국에서는 고용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야마구치(山口) 노동국에서도 재취업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취업지

원책으로는 이직자에 대한 취업활동 방법 및 고용보험제도의 합동설명회 개최, 구인정보 제공이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안내소 이외에도 파견 사무소에 출장상담 코너를 설치하거나 타지방 출신 이직자의 취직지원을 위해 타지 노동국이나 직업안내소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대응책으로 마쓰다 노동조합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뿐만이 아니라 한층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자동차 관련업체 등에서 도급사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시즈오카현(静岡県) 하마마쓰시(浜松市) 주변에는 스즈키 등 자동차 관련업체가 다수 있다. 이들 기업에서 도급사원으로 일하던 교포 노동자가 계약 마감 등으로 고용조정을 당한 후 구직을 위해 직업안내소를 찾는다. 직업안내소에서는 교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10월 1달간 635건(전년동월 대비 2배 이상)의 상담건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취직으로 이어진 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하마마쓰시(浜松市)가 위치한 시즈오카(静岡県) 노동국, 시즈오카현(静岡県), 하마마쓰시(浜松市) 등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및 생활 지원까지 실시하는 종합 창구를 마련하여 대응할 방침이나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마련해 두지는 못한 상태이다.

기업에 의한 고용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간에 실업 불안이 널리 퍼지고 있다. (재)연합종합생활개발연구소가 2008년 10월에 실시한 제16회 '근로자 업무와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답자의 23.8%가 향후 1년간에 실업할지도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008년 4월에 실시된 전화조사의 동일한 질문에서는 18.2%였으므로 고용불안감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로 실업불안을 느끼고 있는 자의 비율이 31.1%에 달했으며, 또한 개인의 연봉이 200만 엔 미만인 자가 27.1%를 기록했다.

## ■ 맺음말

이상으로부터 일본의 노동시장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002년 초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일본 경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장기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한 것은 수출관련 기업이 호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중반부터 경기침체가 시작하더니 2008년으로 접어들자 경기는 침체되었다.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서

브프라임주택 대출문제로 인한 영향, 그리고 최근의 엔고 현상이 수출을 억제한 것이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결과는 서서히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완전실업자수는 6개월 연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4.0%로 오히려 저하되었다. 그러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악화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효구인배율은 도카이(東海), 간토(関東) 남부, 간토(関東) 북부·고신(甲信), 호쿠리쿠(北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컸던 것에 비해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규슈(九州)에서는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007년을 경계로 대다수의 지역에서 고용상황은 악화로 전환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전기전자부품 등, 수출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고용조정 내용은 노동시간 조정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정으로 구성된다. 일본기업은 경기회복 과정의 인재부족 대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으나 그것이 현재 고용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에 따른 고용조정 결과, 지역고용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번 고용조정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부품 등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업종은 관련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역고용 상황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

기업의 고용조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으로서 노동국, 직업안내소, 지자체에 의한 취업활동방법 및 고용보험제도 설명회의 개최, 구인정보 제공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의한 상담창구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없는 일본 제조업은 불가능하다”고 회자되어 왔으나 교포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차 반복되지만 고용변동은 지체되어 통계에 나타나므로 이용가능한 통계정보가 제한되는 이유로 본고 집필시에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사례는 모두 대기업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청기업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쿄(東京)상공리서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10월의 전국기업도산건수(부채액 1,000만 엔 이상)은 1,429건(전년동월 대비 13.4% 증가), 부채 총액이 1조 77억 1,500만 엔으로, 산업별로는 소매업과 운수업이 올해 최다였던 한편, 건설업은 4개월 연속하여 400건 이상, 부동산업도 전년동월 대비 50%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업 도산 및 기업 성과의 악화, 생산계획의 재고에 의해 내년 봄 4년제 대학 대졸예정자 중 취업예정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부터 10년간에 걸쳐 경기침체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 채용의 문을 좁힌 결과, 취업난이 심각화되고 취업 빙하기라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불경기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근로자 급여는 감소하는 경향을 기록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현재 니트족, 아르바이트족,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문제 발단도 이 기간동안 발생하였다. 또다시 일본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KLI**